

국정감사 위해 광주 온 민주당 박지원 의원 인터뷰

## “국가기관 대선 개입 은폐 급급

### 朴정부 ‘정치실종’이 혼돈 불러”

광주고법 및 광주고검 등에 대한 국정감사를 위해 23일 오전 광주를 찾은 박지원 민주당 의원(목포)은 광주일보와 인터뷰에서 박근혜 정부의 ‘정치 실종’이 지금의 정국을 혼돈으로 몰아넣고 있다고 진단했다. 국가정보원, 군, 보훈처 등 국가기관이 대통령선거에 개입한 사건의 심각성을 인식하지 못하고 이를 은폐하는 데만 급급하다는 것이다.

하지만 그는 “대선 불복은 많은 국민이 원하는 것이 아니다”며 선을 그었다. 박 의원은 행정부와 법부를 두루 거친 경륜이 물어나듯 비교적 담담하게, 하지만 조목조목 박 대통령과 청와대에 문제점을 지적하고, 민주당이 나아가야 할 방안을 제시했다. 다음은 일문일답.

- 현재 정국은 어떻게 보고 있나?

▲ 모든 책임은 박 대통령에게 있다고 생각한다. 야당을 인정하고 국정 파트너로 인정해야 하는데, 모든 사안을 자신이 결정하고 있다. 새누리당까지 포함해 국회가 제 기능을 못하는 한마디로 ‘정치 실종’이다. 김한길 민주당 대표가 3자 회담 당시 박 대통령이 “댓글로 당선됐다는 것”이라고 격려했었다고 전하자, 청와대가 “김 대표가 소설을 쓴다”고 반응했다는 보

**국민은 대선 불복 원치 않아**

**검찰 철저히 수사토록 해야**

**내년선거 물같이 공천 없으면**

**지역민도 민주당 지지 안할것**

도를 봤다. 야당 대표는 그렇게 느낄 수 있는 것인데도, 청와대가 야당 대표를 그런 식으로 취급한 것이다.

-‘국정원 댓글 사건’의 파장이 크다.

▲ 민주정부 10년을 살아온 우리로서는 도저히 상상 할 수 없는 일이다. 국정원, 군, 보훈처 등이 총체적으로 정치에, 그것도 대통령 선거에 개입했는데, 대통령이 그 심각성을 모르고 있다. 검찰의 의료원 수사를 보고와 결재로 펌페하면서 결국 수사를 하지 않고 넘으려는 것이다. 21세기 대한민국에서 이런 일이 벌어질 수 있는가. 제가 1000만원의 불법 자금으로 국회의원에 당선됐다면 검찰이 기소하고, 재판부의 판단에 의해 결국 의원직이 박탈될 것이다. 이 자금이 당선에 영향력을 끼쳤는지는 알 수 없지만 불법·부정선거만은 사실이기 때문에 의원직이 상실되는 것이다.

-박 대통령이 어떻게 해야 한다는 것인가.

▲ 민생은 외치는데, 민주주의가 없는 민생은 사상 누각이다. 문제를 더 이상 키우지 말고, 전 정권의 책임으로 선을 긋는다면 검찰이 철저히 수사하도록 하고 관계자가 그에 따른 책임을 지도록 하면 된다. 수사 못하게 하고 ‘찍어내기’를 계속한다면 국민이 용납하



지 않을 것이다.

-민주당 내에서 ‘대선 불복’ 이야기가 나오고 있다.

▲ 일부 강경 세력들은 그러한 이야기를 하겠지만 많은 국민은 이를 원하지 않는다. 고 노무현 전 대통령 탄핵 당시 얼마나 큰 역풍이 불었는가. 국민의 손을 잡고 가야하며, 현정 중단은 바람직하지 못하다. 국정원, 군, 보훈처가 대선에 불법으로 개입했다면 이를 분명히 밝히고 처벌해서 책임을 지우는 것이 우선이며, 그 다음은 국민이 결정할 문제다.

-국정원 개혁 방향은.

▲ 재발 방지를 위한 제도 개선이 우선이다. 개인적으로는 분단 국가의 특수성을 감안해 대공 수사권은 가져야 하겠지만 국내 정치에 개입하는 것은 막아야 한다.

-민주당이 제 역할을 못하고 있다.

▲ 민주당이 야당답지 못하다는 점에 대해서는 부인하지 않는다. 안철수 현상에서 볼 수 있듯 새 정치를 바라는 국민의 욕구는 매우 강하다. 특히 민주당은 전폭적으로 지지한 호남에서 더욱 그렇다. 민주당이 환골탈태해야 하며, 그러기 위해서는 내년 지방선거에서 단체장 및 지방의원 후보를 과감히 물갈이해 공천해야 한다. 그렇지 않다면 지역민들도 민주당을 지지할 리 없을 것이다.

-호남 소외뿐이 더 거세지고 있다.

▲ 호남 출신이 전국적으로 소수가 됐고, 민주당 내에서도 호남 의원들은 소수다. 호남만으로 (재집권은) 불가능하지만 반대로 호남을 제외하고는 역시 (재집권) 할 수 없다. 지금 인구는 500만명도 안 되지만, 출향한 800만명이 전국에 있다는 자부심을 갖고 함께 공동체를 발전시키는데 노력했으면 한다.

/윤현석기자 chadol@·사진=최현배기자 choi@

**나주 혁신도시 · 강변도시  
남다른 부동산 투자법!**

### 선암동 전원 주택용지 분양

#### 자연과 함께 하는 어등산 빌리지

광산구 선암동 414-17번지 일원  
분양면적 7008m<sup>2</sup>(8가구)  
분양가격 전용면적 평당 130만원  
각 필지 면적 약 150평~420평(분할·합병 가능)  
현 토목공사 90% 진행 중

70% 분양완료!

단지설명 자연속 힐링 주거단지  
1. 분양면적은 전체가 쓸 수 있는 전용면적입니다.  
2. 각 필지별 상·하수도관련 연결공사 완료  
3. 각 필지별 건축허가 완료(각종 세금 납부 완료)  
4. 각 필지별 6m로 접

찾아오는 길

선운자구

영광 →

어등산 골프장

호남대학교

어등산 빌리지

상업용지 / 근생용지 / 점포주택지 / 주차장용지

**바로 지금이 기회!!**

나주 혁신도시 전문

**나주 솔로몬 공인중개사**

☎ 061-333-7077, H. 010-5587-3080 / 010-3505-8005

전남 나주시 산포면 매성리 354-32(우정사업본부 후문 방향)

010-5166-0013

010-2475-0933

## 차기 검찰총장 후보군 오늘 ‘윤곽’

후보추천위 회의… 김진태·길태기·소병철·김현웅 등 10여명 심사

‘흔외자 논란’으로 지난달 30일 퇴임한 차동욱(사법연수원 14기) 전 검찰총장의 후임으로 10여명이 후보군에 올랐다.

23일 법무부와 검찰 등에 따르면 후임 총장을 임명하기 위한 검찰총장 후보추천위원회(위원장 김종구 전 법무부 장관)가 24일 오후 열릴 예정이다. 심사 대상자는 10여명이다.

지난 7일 구성된 추천위는 8일부터 15일까지 개인·법인·단체로부터 후보 청탁을 받은 뒤 해당 인사들로부터 검증 동의의 의사를 확인하는 절차를 거쳤다.

현직에서는 연수원 15기인 길태기

(54·서울) 대검 차장과 소병철(55·전남)

법무연수원장이 후보군에 들

관련 법규상 추천위는 각계에서 천거한 인사들과 법무부 장관이 제시한 인사들을 합해 심사를 벌여 최종 후보자 3명 이상을 장관에게 추천한다.

심사 대상자 중 검찰 출신 외부 인 사로는 박상옥(56·경북) 전 서울고검장과 조영근(54·경북) 서울 중앙지검장, 김현웅(54·전남) 부산 고검장, 이득홍(51·대구) 대구고검장 등이 포함됐다.

추천위는 검찰총장이 공식인 상황

에서 최근 국정원 수사들 둘러싼 논

란이 즐풀되는 등 검찰이 심각한 조

직 내용을 겪고 있는 점을 감안, 24일

회의에서 최종 후보자들을 결정할 가능성이 있다.

장관은 추천 내용을 존중해 총장

후보자를 대통령에게 임명 청탁하며

대통령은 국회의 인사청문회를 거쳐

총장을 임명한다. 차기 총장은 검찰의 조직 안정을 가져올 수 있는 리더십과 수사·지휘 역량, 내·외부 신망 등의 요소가 두루 감안돼 임명될 전망이다.

추천위는 당연직 4명, 비당연직 4

명 등 9명으로 구성됐다. 당연직은

김주현 법무부 검찰국장, 권순일 법

원행정처 차장, 위험한 대한변호사협회

회장, 배병일 한국법학교수회장, 신

현운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 이사장

이다. 비당연직(검사장급 이상 검찰

경력자 1명 및 변호사 자격이 있는 각

계 전문가 3명)은 김종구 전 장관, 문

창극 고려래 석좌교수, 이영란 숙명

여대 교수, 정갑영 연세대 총장이다.

/연합뉴스

### 광주시 의료급여사업 최우수

‘3년 연속 전국 건강도시 1위’를 유지중인 광주시가 의료급여사업 평가에서도 최우수기관(전국 1위)에 선정되는 영예를 안았다. 보건복지부는 “전국 차지단체를 대상으로 한 2013 의료급여사업 평가 결과, 광주시를 최우수기관으로 선정했다”고 23일 밝혔다. 광주시는 2013년도 정부합동 평가를 비롯한 의료급여수급자 사례 관리를 통한 재정절감, 의료급여제도 홍보 등에서 높은 점수를 얻었다.

/박진기자 jkpark@kwangju.co.kr

### “지방재정 건전성 확보 매우 중요”

### 지방정부 사업 전 과정 공개해야”

#### 朴대통령 지방자치발전위 회의

박근혜 대통령은 23일 오전 청와대에서 심재평 위원장, 권경숙 부위원장 등 대통령소속 자문기구인 지방자치발전위원회 민간위원 24명에게 위촉장을 수여하고 첫 회의를 주재했다.

지방자치발전위원회는 지난 7월 출범한 지역발전위원회와 함께 앞으로

#### 지방 정가

### 광주시의회, 교육정책 조례 제정

광주시의회는 23일 광주시 교육청의 교육정책과 조례에 대해 사후평가하는 것을 주

요 내용으로 한 조례를 제정했다.

홍인화(민주·북구 4)·김민종(민주·광산 4) 시의원이 공동발의한 이 조례는 교육감과 교육청에서 추진하는 주요 정책과 조례가 제정 목적과 목표대로 실현되고 있는지를 분석·평가해 개선하도록 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사후 평가는 주요 대상에는 학생의 권리·의무와

관련된 정책, 50억원 이상의 공사, 1억원 이상의

용역, 교육청에 속한 조례 등이다.

2년마다 사후평가를 시행하며 교육감이 임명·

위촉한 15명 이내의 평가위원회를 구성해 결과

반영, 개선안 마련 등을 심의·조정하도록 했다.

### 서정성 “우치공원 관리·감독 허술”

광주시의회 서정성(민주·남구 2)은 23일 “우치공원 해양전시관 화재는 광주시가 위탁자에 대한 관리·감독을 허술하게 함으로 나타난 예상된 결과였다”고 주장했다.

서 의원은 “해양전시관은

전 위탁자였던 금호페밀리랜드 측과 2005년도

에 계약을 맺어 영업을 해 오던 우치공원의 관리

위탁자가 현 위탁자인 우치페밀리랜드 측과의

임대계약 문제로 3개월째 운영을 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위탁계약이 우치공원 전제적인 사항을 고려하지 않은 채 계약에만

급급한 광주시의 주민구식 행정에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 진선기 “전대 헌혈의 집 폐쇄안돼”

진선기(민주·북구 1) 광주시의원은 23일 “전

남대가 학교 내에 있는 헌혈의 집을 폐쇄하려고 한다”며

“국립대가 헌액원을 몰아내고 수의사업을 벌이는 것은

민주와 인권의 중심대학인 전

남대 명성에 큰 오점으로 남

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 “깨끗한 학교만들기 적정 임금을”

광주시의회 전주연(통합진보·비례) 의원은 23일 열린 임시회 5분 발언을 통해 “광주시교육청이 제출한 자료를 편석한 결과와 ‘깨끗한 학교 만들기’ 용역근로자들의 평균 실수령액이 71만원에 불과해 이를 최저임금 85만5360원에도 미치지 못하는 실정”이라며 “용역업체는 용역비가 3년째 동결되고 시간당 최저임금이 매년 상승하기 때문에 변칙적인 방식으로 임금을 삼갔고 있다”고 주장했다.

/최원일기자 cki@kwangju.co.kr